문재인 정부 언론 적폐청산 주요내역

▲2017년 3월 21일: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언론 적폐청산 의지 표명

▲2017년 4월 24일: 문재인 후보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간담회에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, 노종면 YTN 기자 등에게 언론 적폐청산 약속

▲2017년 5월 9일: (문재인 대선 승리한 날) 언론노조 MBC지부 김연국 위원장은 “청와대가 직접 못하니 우리가 들고 일어나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”며 청와대와 공조 속에 파업을 할 것임을 시사

▲2016년 12월 14일(박근혜 탄핵안 가결일)~2017년 6월15일:
= 총 3차에 걸쳐 보수 성향 언론인 101명을 언론부역자로 규정해 인신 공격

=전국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, 2017년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‘언론장악 적폐청산을 위한 부역자 명단 3차 발표 기자회견‘ 열어 3차 부역자 명단 발표

▲2017년 7월 15일: 언론노조 MBC지부 위원장이었던 최승호 PD가 만든 영화 ’공범자들‘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공개. 최승호는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공영방송 사장 축출을 위해 영화를 만들었다고 발언

▲2017년 7월 19일: 문재인 정권 100대 국정과제 발표. 1호 과제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약속, 보수 언론인 숙청 플랜 수립한 것으로 추정

▲2017년 7월 20일:
=문재인 청와대는 적폐청산 관련 TFT 설치 공문을 각 부처에 하달. 백원우 민정비서관 전결..7월24일”까지 회신 요구
=언론에 유출된 '국정 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운용 계획 제출' 공문<사진>.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주도. 적폐청산에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음을 입증
=이 무렵 공영방송 장악계획이 공영언론사 장악계획으로 확대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

▲2017년 8월 8일: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. 문재인은 이효성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“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하고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공영방송”이라고 밝혀 공영방송 적폐청산 의지 천명

▲2017년 8월 9일: 이효성 서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선전선동물 ’공범자들‘ 시사회에 참석. 이효성은 최승호의 요구로 시사회에 참석했다면서 “방송 정상화 목소리 크다”고 밝혀 공영방송 적폐청산 의지 표명

▲2017년 8월 11일: 이효성 “MBC 사장과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(방문진)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,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”고 발언하여 강제 해임 의사 공개 표명

▲2017년 8월 14일: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(박범계 위원장) 출범

▲2017년 8월 31일: 민주당 국회의원 회관에서 ’공범자들‘ 시사회. 추미애 민주당 대표, 우원식 원내대표 등 전 지도부와 언론노조 MBC본부 김연국 위원장, 언론노조 KBS 본부 성재호 위원장, 최승호 PD 등이 참여

▲2017년 9월 4일: KBS, MBC 언론노조 동시 파업

▲2017년 9월 5일: 한국언론학회, 한국방송학회,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개 학회 소속 左성향 학자 467명 ’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. 방송학자 공동성명서‘ 발표

▲2017년 9월 8일:
=조선일보 민자당 언론장악문건 발견 특종. 민주당 전문위원실이 작성해 2017년 8월25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유했던 내부 문건 입수해 보도
=“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 탄압 역공 우려가 있다면서 방송사 구성원 중심, 사장 이사장 퇴진 운동 전개 필요성” 제기
='시민사회·학계·전문가 전국적·동시다발적 궐기대회, 서명 등을 통한 퇴진 운동 필요' '언론적폐청산촛불시민연대회의(가칭) 구성 및 촛불 집회 개최 논의' 등도 제안

= "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 장악·언론인 탄압, 권언유착 사례 등의 언론 적폐 실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고발하는 홍보·선전전을 전개해야 한다"며 해고·정직 등 징계를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대회 개최, 영화 '공범자들' 단체 관람 제안
=문건의 주요 내용 대부분 실행. 문건대로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들을 물리적 폭력 등으로 압박해 사퇴를 유도하고, 이사회의 여야 구성비를 강제로 변경해 사장을 해임
https://www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7/09/08/2017090800250.html

▲2017년 11월 13일: 방문진 이사회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결의

▲2017년 11월 14: MBC 노조 72일간 파업 종료

▲2017년 11월 22일: 최민희 민주당 의원 팟캐스트 '새가 날아든다'에 출연해 MBC 내부 객관적 보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편파 보도키로 했음을 공언

▲2017년 12월 5일: 최승호 MBC 사장 취임..본격적 노영방송 시작

▲2017년 12월 27일: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, 박진수 언론노조 YTN 지부장, 최남수 YTN 대표이사 YTN 바로 세우기 및 미래 발전위원회 설치 합의

▲2018년 1월 19일: **MBC정상화위원회 출범**. 민주노총산하 MBC본부가 주축. 보도국 국부장단 전원 보직 해임. 파업 동참 거부 기자 약 80명 뉴스 제작 배제. 19명 해직. 6명 정직 6개월 중징계

▲2018년 1월 22일: 임기가 10개월 남은 고대영 KBS 사장 해임

▲2018년 2월 13일: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 임기 한달 앞두고 조기 사임

▲2018년 3월 6일: 조성부 사장 후보자 공개설명회에서 "적폐청산과 개혁만이 연합뉴스의 살길"이라면서 "적폐청산과 개혁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"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에 공조할 것임을 선언. 정권과 유착 관계

의심(https://www.ajunews.com/view/20180308203109791)

▲2018년 3월 28일: 연합뉴스 조성부 사장 취임

▲2018년 4월 9일: KBS 양승동 사장 취임: 양승동은 방송 공정성 위반 등을 조사 규명할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
==> 조성부, 양승동 취임 이후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공작은 연합뉴스를 포함하는 공영언론장악 공작으로 변모한 것으로 추정됨. 일사불란하게 연합뉴스와 KBS에도 인민위원회 격의 보수 언론인 숙청기구 설치 및 징계 착수

▲2018년 4월 25일: 홍제성 신임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장, 노사공동으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“적폐청산”을 하겠다고 공언

▲2018년 5월 1일: 연합뉴스, 위원장 이희용 포함 4명 규모의 혁신위원회 출범. 이희용은 정년 퇴직후 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으로 영전. 조성부 사장은 노사공동 혁신위원회 거부하고 임의 기구로 회사만의 단독 혁신위 출범시킴

▲2018년 5월 4일: 최남수 YTN 사장에 대한 중간평가 투표에서 불신임 후 사퇴

▲2018년 6월 5일: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출범. 진미위 위원장이었던 정필모 부사장은 2020. 3. 6. 사표 제출 후 약 한달 만에 시민당 비례대표 8번으로 공천받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됨
==>2019년 6월 9일 진미위 활동결과 보고안건 KBS 임시이사회에 보고. 18명 징계 권고. 2019년 6월 24일 진미위 징계 권고 수용해 19명 중 17명에 대해 인사위 개최. 정지환 보도국장에 해임 통보. 3명은 1~6개월 정직, 1명은 감봉, 12명은 주의 조치 처분
==> 2109년 10. 29일 서울남부지법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17명이 낸 징계절차중지 가처분신청 인용.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징계요구 권한 없어 이 기구의 징계요구는 절차상 위법 판단
==> KBS 인사위 다시 열어 정지환 6개월 정직 처분...현재 소송 중

▲2018. 6월 19일: 연합뉴스 인사위에서 조성부 사장, 이병로 부사장은 이창

섭 전 편집국장에 대해 권고사직 처분

▲2018년 10월 8일: 보도전문채널인 YTN은 최남수 전 사장이 내정자 신분이었던 2017년 12월 언론노조와 '와이티엔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' 설치에 합의하고 2018년 1월 기구가 발족했으나 신임 정찬형 사장이 들어선 뒤인 10월 8일 인선과 함께 활동을 시작

▲2022 10월 14일: 언론인 적폐청산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전 KBS 사장 벌금형 300만 원 대법원 확정

▲2023년 2월 9일: 고대영 전 KBS 사장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(재판장 함상훈)에서 해임취소소송 승소